

TPP 타결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공 열쇠

* 이 자료는 우라타쇼지로(浦田秀次郎) 와세다대학 교수와 키무라(木福成) 케이오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중대국면의 TPP교섭, 관세철폐 일본에 막중한 책임(15.1.13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일본의 수출확대와 농업구조개혁을 위해서는 TPP교섭이 반드시 필요
- 농업에 대한 지원은 국민적 부담이 가벼운 직접보조로 해야 함
- 경쟁정책 분야, 일본기업들의 사업기회 획득에 큰 도움 줄 수 있음

□ TPP 타결,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성공에 절대적

- TPP교섭이 난항을 거듭, 작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기대되었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, 타결목표 시기도 명시되지 못했음
- 남은 쟁점은 많은 교섭 국가들의 이해가 얹혀있는 시장접근, 지적재산권, 국영기업 개혁 등이나 우선 넘어야 할 장벽은 미·일 2국간 교섭임
- TPP는 아태지역에서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새로운 경제 규범 책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TPP가 타결되지 않는 경우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중요 항목인 수출확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, 농업개혁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,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TPP 합의·실시가 절대적임

<미·일 TPP 협상의 주요 쟁점>

품목 (관세율)	일본 측 주장	미국 측 주장
쇠고기 (일본: 38.5%)	연간 수입량이 20만~30만 톤에 도달하면 safeguard 도입	safeguard 발동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것.
돼지고기 (일본: 저가격대:482엔/kg)	kg당 관세를 100엔 이하로 인하할 용의. 단 safeguard 도입	"
쌀 (일본: 341엔/kg)	국내 과잉공급 상태이므로 수용할 여지가 없음.	주식용 쌀 수입을 확대할 것.
자동차 (미국: 2.5%)	관세 즉시 철폐	10~20년 걸쳐 철폐

자료: 日本經濟新聞, 2015.1.12일자

□ TPP교섭 부진, 일본의 책임도 큼

- TPP 교섭이 부진한 이유는 미국의 국내 정치문제도 얽혀있지만 일본의 책임도 큼
-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TPP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예외 없는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포함한 교섭참가 12개국 중 이제까지 FTA에서 100% 가까운 관세철폐를 약속한 경험이 없는 국가는 일본뿐임
- 일본은 14개 FTA에 대한 발효·서명을 마쳤으나, 관세철폐율은 세부품목 기준으로 90%가 못됨
 - 일본도 TPP 교섭에서는 농산물 관세 등에서 이제까지 이상의 자유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자유화 수준은 아직 낮음
 - 일본이 뒤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협정 내용이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외국의 비판도 일리가 있음
-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, 관세 등이 많이 잔존해있는 것이 과거 GATT·WTO교섭의 족쇄로 작용, 일본의 교섭력을 약화시켜왔음
 - 쌀의 관세화·관세철폐를 거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(minimum access확대)는 일본의 국익을 크게 손상시켜왔음

□ 무역 자유화를 전제로 한 산업 내·산업간 조정과 이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필요

- TPP에서는 즉시 관세철폐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자유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, 일본으로서는 이를 활용하여 교섭을 타결시키는 것도 필요함
- 그러나 이것이 농업개혁의 종착역은 아님
 - 최종적으로는 무역을 전면 자유화하고 경쟁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부터 높은 부문으로 노동·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이동시켜야 함

- 그와 같은 산업 내·산업간 조정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소득보전이나 보다 생산적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기술훈련이나 교육 등 무역조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
- 그러나 비효율성을 낳는 무역보호를 안이하게 계속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, 백보양보하여 정칙적인 이유로 일부 농업보호를 남겨놓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대체해야 함
- 무역장벽에 의한 보호는 보호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들 눈에는 보여 지지 않으나 실은 효율이 낮음
- 소비자는 높은 국내가격을 허용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국내생산자에 생산보조금을 지불하는 셈이나, 동시에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버리는 부분도 부담하게 됨
- 무역보호를 중단하고 증세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직접보조금을 공여하는 쪽이 소비자의 부담이 오히려 가벼워짐
- 소비세 증세에 관한 논의 가운데 저소득자의 부담을 배려한 식료품 등을 대상으로 한 경감세율 적용이 제안되었으나, 실은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·삭감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경감세율을 검토하기 전에 농산품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함

□ 이치에 맞지 않는 교섭상대국의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

- 국경조치 분야에서는 양보하는 한편, 이치에 맞지 않는 교섭상대국의 요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함
- 상세한 교섭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예컨대, 일본 국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완화요구도 일본 국내기준의 근거가 명확한 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됨
-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미국산자동차실링의 설정 등을 하고, 일본에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, 이 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미국 측에 철회토록 강력하게 교섭해야 함

□ 비즈니스 환경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

- TPP에서는 상품, 서비스, 투자 분야에서도 이제까지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실현됨
- 나아가 21세기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릴 것인 바, 일본기업으로서 바람직한 비즈니스 환경이 확대될 것임

① 정부조달

- 기대되는 정책분야의 하나가 정부조달임
- 정부조달은 WTO에서도 플루리협정(서명한 국가들만이 의무를 지는 협정)으로 되고 있어 많은 신흥국·개도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음
- TPP참가국들의 정부조달에 무차별원칙이 적용되게 되면 대상국 정부에 컴퓨터 납품이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입찰시 외국업자가 무차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,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큰 사업기회가 될 수 있음

② 경쟁정책

- 경쟁정책, 특히 국영기업과의 경쟁조건의 평준화에서도 전례 없는 규범이 될 것임
- 지적재산권 보호도 의약품의 특허기간 등 상세한 부분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, 신흥국·개도국의 사업 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임

③ 분쟁해결

- 분쟁해결도 중요한데, 투자가대 국가 간 분쟁해결(ISDS)조항은 미국기업들이 터무니없는 소송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나쁜 평판도 많음
-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신흥국·개도국에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이나 자의적인 정책적용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을 것임
- TPP에 ISDS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발동되지 않아도 부적절한 정책사례에 대한 억제효과도 적지 않을 것임

□ 중국의 TPP교섭 참가도 고려해야

- 현 시점에서는 중국은 TPP교섭에 참가하지 않으나, 한국과 필리핀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, 중국도 진지하게 참가를 검토할 것임
- 중국 국내에서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
- 중국의 참가도 시야에 넣어 중국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을 도입하거나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 규범을 TPP에서 제정해야 함

□ TPP와 여타 FTA와의 관계

- 미국과 EU간에는 환태평양무역투자협정(TTIP)교섭이 추진되고 있으나, 제1의 목적은 경제적 규범의 제정임
- TTIP가 TPP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TTIP의 규범이 세계적인 규범으로 되어버려 일본기업에 불리한 사업 환경이 창출될 위험성도 있음
- 또한 TPP 교섭은 여타 FTA교섭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
- TPP교섭이 타결에 가까워지면, 한중일, 일EU, RCEP 등의 FTA교섭도 가속될 것임
- 역으로 TPP가 늦어지면 다른 FTA교섭도 늦어질 것임
- TPP 교섭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로부터 무역 촉진권한(TPA)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
- 2014년 11월 중간선거에 의해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상하양원의 과반을 점하게 된 것은, TPP합의에는 순풍으로 작용
- 앞으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TPA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됨. 끝.